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25조 등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구 호남 12곳 재획정 불가피

<광주 2·전남 4·전북 6>

현재 “선거구 헌법 불합치...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
수도권·충청 늘고 호남·영남 줄 듯...정치권 지각변동 예고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결정에 따라 입법이 이뤄지면 오는 2016년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이 상한 27만7966명, 하한 13만 8984명으로 변경되면서 전국적으로 62개 국회의원 지역구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북구 을과 순천·곡성이 인구 상한선을 넘게 되고 동구와 여수갑, 무안·신안, 고흥·보성은 하한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이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현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차지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

조정 대상 국회의원 선거구

※ 괄호는 인구수

초과 선거구 (전국 37·호남 4)

광주	북구 을 (294,355)
전남	순천시 곡성군 (308,182)
전북	전주시 덕진구 (287,653) 군산시 (278,119)

미달 선거구 (전국 25·호남 8)

광주	동구 (101,656)
전남	여수시갑 (125,667) 고흥군 보성군 (115,800) 무안군 신안군 (125,488)
전북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105,122) 남원시 순창군 (115,442) 고창군 부안군 (117,757) 정읍시 (117,524)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 (2014. 9월말 현재)

총인구수	선거구	평균인구수	하한인구수	상한인구수
51,284,774	246	208,475	138,984	227,966

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현재의 결정으로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전면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할 경우,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이 많은 호남과 영남 지역 의석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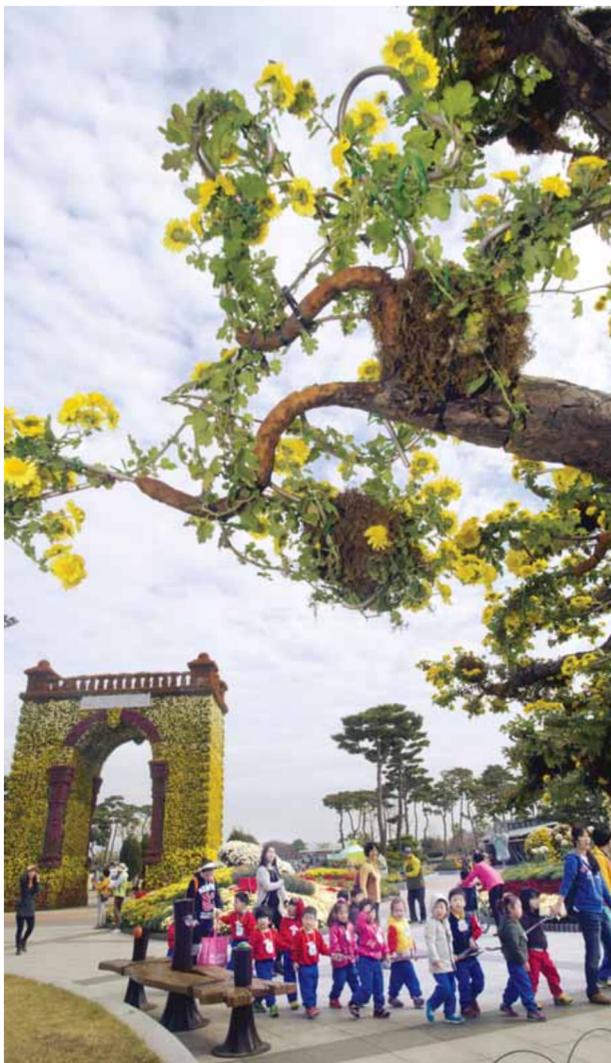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지역구는 경기도가 16곳, 서울, 3곳, 인천 3곳, 충청은 4곳인 반면, 영남과 호남은 각각 9곳, 8곳의 지역구가 하한선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구간 경제조정과 국회 정계특위에서의 특례 조항, 선거구 획정 등을 통해 지역구를 지켜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에서 2곳 안팎의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지형 변화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결정을 계기로 선거제도 개편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장,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함평천지 '국화천지' 30일 '국향대전'이 열린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갖가지 모양의 국화 조형물을 감상하고 있다. 높은 가을 하늘과 활짝 핀 노란 국화가 함께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국향대전은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무성 “정쟁중단·사회적 대타협 운동”

문희상 “총선 전 개헌·남북정상회담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견해를 각각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먼저, 김 대표는 현 상황을 '총체적 위

기로 규정하고 여야가 중심이 돼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어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

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제 제약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한 뒤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해 20대 총선을 치르기 전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대북 관계와 관련,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부산·울산·경북 시·도 행정협의회 구성 원전 안전 공동대처

전남도는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등 주요 사안에 공동 대처·협력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북과 함께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31일 대구 엑스코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4개 시·도 부단체장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협의의장은 부산시, 울산시, 전남도, 경북도 순으로 1년씩 윤번제로 맡는다.

행정협의회는 앞으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원전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원전 안전대책과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원전 관련 주요 현안 발생 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전 안전대책과 방사능 방재대책에 관한 사항(정부의 대책 촉구 등 포함) ▲원전안전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연구에 관한 사항 ▲원전훈련, 방사선 감시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사용후 핵연료, 지역 자원시설에 인성 등 각종 현안 공동대처 ▲기타 선진 원전안전대책 공동연구,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원전 전담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 등 추진 기반과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자체 원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정순주 전남도 안전행정국장은 “현재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4개 시·도의 행정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 대처해나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옥천농협 지원금 100억 날렸다 ▶6면

학교설립60주년 기념 대음악회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11월 6일 저녁 7시 은행관 3층 대예배실
광신대학교 062)605-1130

끌어올리세요
당신의 아름다움
헤라 모디파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헤라 모디파이어- 탄력의 중심에 작용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로 한 차원 올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시선이 향합니다

HERA
MODIFIER
Cell-Bio Layer Balm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4(수신료유감면) www.hera.co.kr